에너지 산업을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자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 을 국회의원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이라는 동력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데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간 산업계는 최종 에너지수요의 60%를 차지하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값싼 에너지는 최근의 수급 불안에서 볼 수 있듯, 전력사용량의 과도한 증가라는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 여건과 대외 환경변화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국제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깊은 통찰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의 구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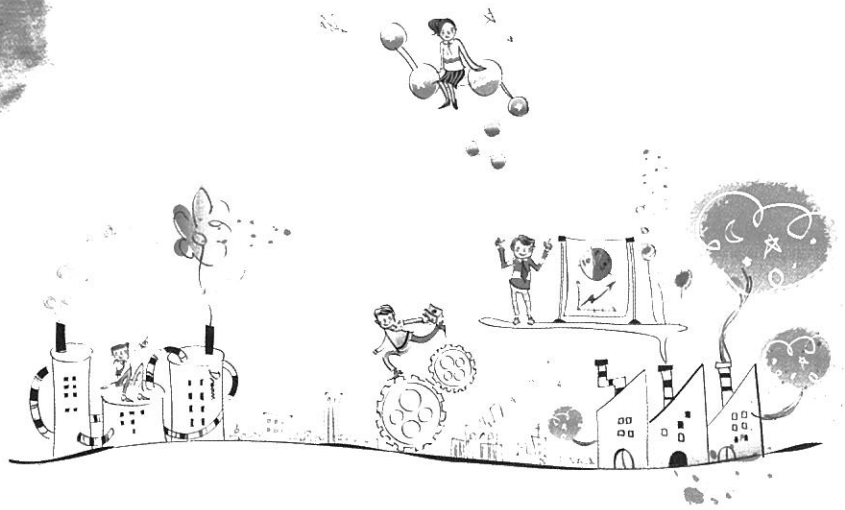
에너지산업 자체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에너지산업은 제조업 · 중공업 등 주요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자체로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도 에너지산업의 수출비중이 19%에 달하고, 2012년 국내 석유제품수출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그리드 · 고효율에너지기기 등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부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선도적인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도입량 중 해외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비율인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1년 기준 96.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725억불에 달한다. 또한 인근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이 용이한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 에너지 섬 '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분리되어 있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에너지와 통상을 연계하는 정책 수립이 수월해진 만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부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선도적인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협상 등 전 세계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안정적인 수급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에너지산업은 오랜 기간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시장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평가하며 전력 · 가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폐쇄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에너지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러한 시장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을 통해 IT기술과 재생에너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측한 바 있다. 수평으로 확장된 네트워크와 비화석 에너지 사용 증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술적 한계 및 제도적 규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Post-화석연료 시대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회수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환경 규제나 지역 민원 등도 민간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에너지산업 자체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

민간이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을 선제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위주의 수요 견인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보급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기술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투자 확대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시장을 키워가고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장과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이자 미래 에너지산업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에너지산업 자체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에너지산업은 제조업 · 중공업 등 주요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자체로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도 에너지산업의 수출비중이 19%에 달하고, 2012년 국내 석유제품수출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그리드 · 고효율에너지기기 등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우리 경제는 싸고 질 좋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을 뛰어넘어 안보와 효율을 동시에 추진하되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에너지산업 자체를 새로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노력 역시 요구된다. 이러한 선진화된 에너지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